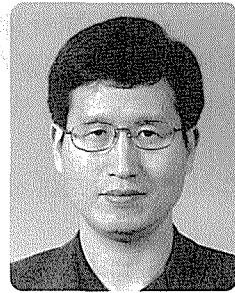


# 갈림길에 선 정유업

## - 활로모색 골몰 -



신 삼 호  
연합뉴스 차장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가느다란 한가닥 밧줄에 메달려 수천길 낭떠러지를 힘겹게 건너는 공룡’

정유업계의 원유 관세인하 요구 배경을 설명하던 한 업계인사가 정유업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휘발유를 비롯, 석유와 에너지 시장에서 탄탄한 과점체제를 누리고 있는 듯 보이는 정유업계의 실상은 밖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거대기업이라는 허울뿐인 외피에 가려 일반국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기력이 크게 쇠약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유업계가 국제원유값, 환율 등 외생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더해 시장개방과 가격 자유화, 복수판매 실시 등으로 기존 사업

모델이 흔들리면서 비상벨이 켜진 상태라는 것이다.

정유업계의 취약한 실상은 작년 정유업계가 2천 3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특히 석유사업 분야의 적자가 5천564억원에 이르는 등 석유사업 분야에서 손실이 컸다는 점은 각 정유사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안겨다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정유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를 맞았고 현대오일뱅크도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초의 1차 인원감축에 이어 금명간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뼈를 깎아내는 자구노력을 진행중이다.

## 사면초가에 빠진 정유업계

올해초 타 업종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정유업계 한 임원은 “정유업은 시계 바늘이 저녁 7시쯤에 가 있는 선 셋 비즈니스”라고 평가하면서 바늘을 뒤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한 정유사 사장은 사석에서 현재의 시장상황이라면 거액의 투자비를 들여 만든 정유장치를 단돈 1원에라도 팔아버리고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들여와 계열 주유소를 통해 파는 것이 영업적 측면에서는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뿌리이자 석유화학업의 근간인 정유사들이 이같은 어려움에 빠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사업은 IMF이후 석유소비 증가가 정체되면서 뼈격대기 시작했다. 소비가 예상외로 정체되면서 기름이 남아돌았고 정유사들은 남은 기름을 처리하기 위해 혈값수출, 현물시장에서의 덤핑 등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익성에 주름살이 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석유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사들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차를 이용,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면서 정유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수입사들의 공세에 맞서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방식을 동원, 방어벽을 쌓는 한편 비상표 제품에서는 수입사 가격에 근접하게 가격을 낮추는 맞대응에 나섰다. 수입사의 공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 역시 복수판매 시행을 계기로 정유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간 교섭력이 급속히 주유소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유사들이 직영 주유소라는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는데다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력균형은 아직 정유

사가 유리한 입장이지만 최근의 무폴 주유소 증가 현상에서 보듯이 무게중심 축은 시간이 갈수록 주유소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석유시장 자체에서도 정유사들의 입지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환경문제 등 시장 외부에서도 정유사를 압박하는 각종 규제와 견제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디젤유의 황함량 기준이 15PPM으로 낮춰지는 등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도쿄 기후협약이 시행될 경우, 정유업은 엄청난 환경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LNG(액화석유가스)를 비롯, 대체에너지의 급속한 성장도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LNG 특소세 감면 추진을 둘러싼 파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한 때 보조 에너지원으로 치부됐던 가스가 급속하게 성장, 석유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 수입사에 잠식당한 시장

정유업계는 수입사와의 경쟁에서도 이미 한풀 꺾였다. '97년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직후 수입사들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서 '무서운 아이'로 등장했으며 막대한 자본력과 꼭 짜여진 유통망을 무기로 한 기존 정유업계의 방어막을 뚫고 5년만에 석유시장의 5%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휘발유, 등유, 병커C 등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수입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 달했다. 특히 휘발유는 7.08%, 실내 등유는 11.67%, 경유는 6.77%를 차지하는 등 수입사들은 이제 국내 석유시장의 판도를 충분히 뒤흔들만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기존 정유업계에 비해 자본력이나 조직, 유통망 등에서 한 줌에도 지나지 않는 수입사들이 이처럼 팔목

할만한 신장세를 보이는 데 대해 크게 두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수입사들이 틈새를 뚫는 치밀한 영업력을 발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데 반해 기존 정유업체는 과거의 독과점 시절의 타성에 젖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제품 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유사가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다 정제해서 시장에 파는 것이 국제시장에서 제품을 들여다 파는 것에 비해 가격이나 리스크 부담, 자금 회임기간 등의 면에서 볼 때 원천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수입사로 등록된 회사중 실제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는 다섯 손가락 정도로 꼽힌다. 앞으로 어느 수입사가 영업대열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의 제품가격 구조가 현재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유사들의 경영형태도 변하지 않는다면 수입사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공산이 크다. 물론 수입사가 등장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고 경쟁을 부추겼다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정책도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원유가격, 환율, 정제비, 물류비 등 원가요인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지만 이제는 수입사와의 경쟁에 따라 국제제품 가격 추이도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국제제품가격이 정유사 가격결정의 주요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유사들은 국제시세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는 정유업계 가동률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직도 부정적인 일반인 시각

정유업계가 이처럼 시장 안팎으로 초유의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정유업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달라진 시선이나 정책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무엇보다도 과거 유가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일정액의 정제마진을 보장해주던 시절에 형성된 '정유업은 돈 버는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반면 자유화 및 규제완화로 정책적 보호막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유사들이 원유가가 오르면 짹째 기름값을 올렸다가 떨어지면 미적거리다 여론에 밀려 내리는 시늉만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선뜻 정유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 만일 정책적 배려에 나섰다간 정부가 앞장서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 돈 많이 버는 정유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가 십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역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을 세원 확보수단으로 이용, 막대한 교통세를 부가함으로써 유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세금부과에 따른 불만은 고스란히 정유사가 뒤집어쓰고 있지만 정부는 '내 일이 아니라 식'으로 세금만 거둬가고 정유사 이미지 개선이나 정유업지원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유업계 내부에서도 서로간의 견제와 갈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극복을 위해 업계가 머리를 한 데 모으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유업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인 산업자원부는 정유업계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자유화 등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수단이 대부분 사라진 데다 정부조직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예전과 같지 못해 환경부 등의 간섭과 공세에 별다른 보호막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비람직한 석유정책 방향은

정유업계가 갈림길에 서 있으며 변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절박하게 다가오지만 아직 변화방향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나 비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화·개방화 시대에서 기업의 화두는 시장이다. 이윤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상황이 기업의 모든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결정하는 중심축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유사 역시 항상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변화에 그때그때 재빠르게 대응하며 경영전략을 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유업은 소비자 정제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거대 정제 장치를 계속 끌고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소비자 정제주의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일정량의 비축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등 수입사에 비해 역사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정유사들은 불평한다.

정유사는 이 때문에 국내 산업발전 단계, 에너지 안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같은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관세 등을 통해 정유산업을 간접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유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원유에 대한 관세인하다. 정유업계는 표면적으로는 원자재에 무려 5%라는 관세를 물리는 것은 국내 산업육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및 자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원유 수입시에 무세 또는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가 원유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석유제품과의 관세차를 확대, 수입사의 공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

는 정유사들의 절박한 필요가 놓여 있다. 안정적인 국내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려면 소비자 정제주의를 포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유사가 정제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입사들은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 확대는 수입사들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 경쟁체제 초기에 있는 국내 석유시장을 다시 독과점 시장으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차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부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대폭 줄이는 등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초 정유업계가 매출목표를 줄여 잡으면서 수익성 제고를 제 1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정유업계의 달라진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정유업계가 철저히 시장우선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줄이는 대신 계열 주유소에는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일본식 모델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국제석유시장의 우수 공급자였던 한국 정유사들이 대거 수요자로 돌아설 경우, 국제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고 이에 따라 균형점이 과연 어디서 형성될 것인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가동률을 줄인다손 치더라도 정유사는 거대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매입한 원유가 상품으로 변해 시장에 나올 때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차를 거쳐야 하는 등 수입사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다.

따라서 안정적인 석유공급과 에너지 안보라는 전제를 딛고 서 있는 소비자 정제주의가 아직도 유효한 정책방향인지의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그 결과 아직 국내 산업여건상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일정부문의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